

# 아베 정권 하의 일본 의원들의 보수 성향 분석

이이범 \_ 강릉원주대학교<sup>1)</sup>

## 목 차

- I. 서론
- II. 연구가설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가설검증
- VI.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의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들의 보수화 수준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정책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사히신문사와 마이니치신문사가 국회의원 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자료를 활용했다. 이 분석에는 진보-보수의 분포가 잘 드러나는 정치이념과 14개의 정책들에 대한 의원들의 응답을 이용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현직 의원들의 보수화 수준은, 놀랄만큼 강경보수 성향을 띠고 있고, 일반인들의 보수화 수준보다 크게 앞서 있었다. 특히 중의원 의석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의 강경 보수화 수준은 놀랄만큼 높았다. 자민당의 참의원의원들 역시 중의원의원 만큼은 아니지만, 강경 보수 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직 자민당 의원들의 보수화 수준은 2012년 9월부터 자민당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강경보수적인 아베수상의 직접

1)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정치전공.

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아베수상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강한 일본의 회복’과 ‘일본 역사에 자존심을 갖자’는 주장은, 일본 국회의원들의 강경 보수 노선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것 같다.

## 주제어

일본정치, 아베수상, 일본의 보수주의, 자민당

.....

## I . 서론

일본의 정치 지형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총선을 거치면서 크게 바뀌었다. 2009년 9월 제45회 총선의 결과 자민당의 장기집권구도가 붕괴하고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했다. 2005년 총선에서 크게 패해 113석에 머물렀던 민주당은 전체 480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3년 3개월이 지나 2012년 12월 실시된 제46회 총선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이 참패하고 정권은 붕괴했다. 2009년 총선의 참패로 119석에 불과했던 자민당의 의석수는 294석으로 급증했다. 2009년과 2012년의 두 차례의 총선결과로 자민당의 의석수는 크게 증가했고, 2000년대 들어서 자민당과 집권경쟁을 전개해온 민주당은 제1 야당의 지위를 가까스로 지켰지만, 자민당의 집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의 지위는 거의 상실했다. 2005년, 2009년, 2012년 3차례의 총선에서 연속해서 예기치 못했던 압승과 대패가 거듭되면서, 자민-민주 양당의 초선의원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의 대승과 참패가 거듭되면서,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선의원들의 대부분은 재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2005년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의 초선의원은 83명에 달했다.<sup>1)</sup> 2009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은 158명이었고, 이 가운데 143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러한 민주당 초선의원 143명 가운데 2012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수는 184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민당의 초선의원은 119명에 달했다.

2009년과 2012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대패하고 제1야당이 대승하면서 자민-민주 양당 의원들의 세대교체도 빨라졌다. 특히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민주당은 중소 정당의 수준으로 몰락했다. 2014년 총선에서 13석을 늘려 73석이 되었지만, 자민당과 집권 경쟁을 하던 과거의 민주당의 위상은 사라졌다. 2009년 총선 이후 민나노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러 신생 정당이 등장했지만 이미 해체되었고, 자민당과 집권 경쟁을 전개할 수 있는 야당의 출현은 현재로서 요원한 것 같다.

2014년 총선 결과에서도 자민당의 의석수는 거의 유지되었다. 자민당은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다. 여전히 참의원 내 과반의석에는 미달하지만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더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의 아베정권은 역대 어느 내각보다 강경한 보수 우파 노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에 임명된 19명의 각료 중 16명이 일본의 최대 우익 조직인 '일본회의'를 지지하는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나, 아베 내각의 우경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sup>2)</sup>

---

1) 이들 가운데 2009년 총선에 73명이 입후보해 재선의 고비를 넘긴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2009년 8월 31일자 시사통신기사). 2009년 총선에서 탈락했던 자민당의 초선의원들 가운데 34명은 2012년 총선에서 출마해 재선되었다(2012년 12월 17일 시사통신기사).

2) 「19閣僚中15人がメンバー 最大右翼組織「日本会議」の危険度」, 『日刊ゲンダイ』, 2014년 9월 6일(<http://www.nikkan-gendai.com/articles/view/news/153143/1>; 검색일 2015.10.31)

아베내각은 과거 자민당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주요 골자를 크게 바꾸고 있다. 2015년 9월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켜 과거 자민당 정권이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 정부 방침으로 자율 규제해오던 무기수출(3원칙)<sup>3)</sup>도 근본적으로 새롭게 수정했다. 또한 2014년 4월 내각 결의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롭게 결정해, 방위관련 제품들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 금지시했던 안보와 자위대, 무기수출 관련 여러 조치들이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와 강한 일본의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위헌 주장과 다수 유권자들의 반대 의견도 쉽게 무시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구조에서 내각이 주요 정책 노선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조건이다.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아베 내각이 기존의 주요 안보정책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런 강경 정책들에 대한 국회의 승인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15년 11월 현재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전체 의석의 68.7%(중의원 326석)와 55.8%(참의원 135석)를 각각 지배하고 있다.

---

3) 자민당 정권 하에서 1970년대 중반 일본정부가 평화국가인 일본의 입장에서 국제분쟁 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국가와 공산권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 원칙임.

〈표 1〉 2005년 이후 선거에서의 자민-민주 양당 당선자수의 변화

구분	중의원선거				참의원선거		
	2005	2009	2012	2014	2007	2010	2013
자민	296 (61.7)	119 (24.8)	294 (61.2)	291 (61.3)	83 (34.3)	84 (34.7)	115 (47.5)
공명	31 (6.5)	21 (4.4)	31 (6.5)	35 (7.4)	20 (8.3)	19 (7.9)	20 (8.3)
민주	113 (23.5)	308 (64.2)	57 (11.9)	73 (15.4)	109 (45.0)	106 (43.8)	59 (24.4)
일본유신회 <sup>4)</sup> (유신당)	-	-	54 (11.3)	41 (8.6)	-	-	9 (3.7)
민나노당 <sup>5)</sup>	-	5 (1.0)	18 (3.7)	-	-	11 (4.5)	18 (7.4)
기타정당	40 (8.3)	27 (5.6)	26 (5.4)	35 (7.4)	30 (12.4)	22 (9.1)	21 (8.7)
계	480 (100.0)			475 (100.0)	242 (100.0)		

\*의석수는 일본 총무성의 공식집계 수치이며, ( )안의 숫자는 의석점유율임.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현직 의원들의 정책성향은 어느 정도로 강경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일까?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보수 강경 노선의 여러 정책들이 너무도 쉽게 국회를 통과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정책노선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 의문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이 의문의 실증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본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몇 가지로 세분했다. 첫째, 현재 아베 내각의 강경 보수 노선의 주요 정책에 대해 현재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들은 개별 정책별로 어느 정도가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 둘째, 현재 자민당 의원들의 정책성향에는 아베 수상의 강한 보수적인 정책노선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까? 그리고 영향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4)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는 2014년 7월 31일 해체되어, 차세대당(次世代の党)과 유신회(維新の党)로 분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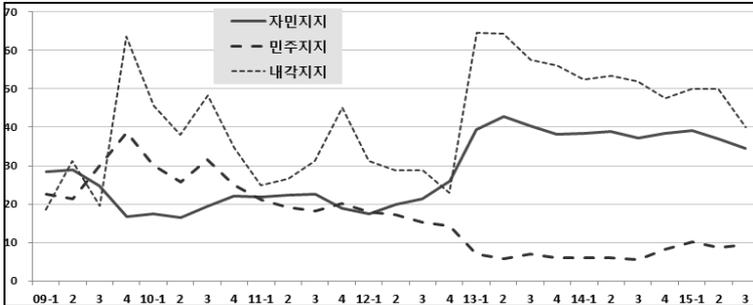
5) 2014년 11월 28일 해체되어 에다 겐지(江田憲司) 그룹을 중심으로 유이노당(結いの党)을 거쳐 유신당(維新の党, 2014년 8월 1일 창당)으로 옮겨갔다.

그룹간의 편차는 어느 정도일까? 셋째, 현직 자민당 의원들의 강경 보수 성향에 아베 수상의 영향이 일정 부분이 있다면, 그 영향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일까? 이상과 같은 3가지 의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연구가설

자민당의 정치 구도에서 내각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수상의 정책노선에 반기를 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고이즈미와 아베 정권에서는 수상이 당 집행부의 인사를 주도하고 당 총재로서 공천권 행사까지 깊이 개입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총선과 참의원선거에서 당 대표에 대한 평가는 총선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내각지지율이 높을수록 주요 정책과 당내 의사의 결정과정에서 수상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림 1〉 2009년 9월 민주당 집권 이후의 내각 및 자민-민주 지지율 추이<sup>6)</sup>



- \* 2009년 8월(45회), 2012년 12월(46회), 2014년 12월(47회) 총선이 각각 실시됨.
- \* 민주당 하토야마내각 출범: 2009년 9월; 노다내각 2011년 11월 중의원해산의결
- \* 자민당 아베 제2차 내각 출범: 2012년 12월

6) NHK의 월례정치외식조사 데이터를 분기별로 평균하여 작성함.

2012년 12월 총선은 민주당 노다(野田佳彦)내각의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크게 하락하고, 자민당의 재집권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당시 아베 자민당 총재는 자민당 후보들의 공천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2014년 12월 총선은 아베 제2차내각의 지지율이 50% 전후로 높았을 때 실시되었다. 따라서 2012년과 2014년 총선의 자민당 초선 의원들은 아베 수상의 정책노선에 가까운 인물들이 대거 공천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참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 또한 아베 수상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아베 수상이 2012년 9월 당 총재로 복귀한 이후 초선으로 당선한 의원들은 그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현직 의원들에 비해 아베 수상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아베 수상의 영향력은 현직의 기득권이 인정되는 기존 의원들의 공천보다는 2012년과 2014년 신인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그 영향이 컸을 것이다. 이때 영입된 중의원 의원들은 현재 초선과 재선들이다. 즉 초선과 재선의 의원들은 3선 이상의 의원들에 비해 더욱 강경한 보수적인 정책 성향을 띤다면 본 가설은 실증될 것이다.

그리고 현직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 정책성향에서 강경 보수적이라는 것은 명확하다.<sup>7)</sup> 여기서 현직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보수 성향이 아베 수상의 영향을 받았다면, 아베 수상이 강조하는 강경보수의 방향과 현직 의원들의 강경보수 성향의 방향이 상당히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아베 수상의 정책노선이 자민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보수 성향이 강한 자민당 의원들의 정책성

---

7)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아사히신문사와 마이니치신문사에서 국회의원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상세하게 보도되었고, 현재에도 해당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의 공통적인 특성은 아베 수상이 강조하는 보수 정책의 방향에 근접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베 수상이 재집권한 이후 보수색을 강하게 띠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은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14개의 정책들이다. 아베 수상은 앞서 언급한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일체 응답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정책성향과 다른 현직 자민당 의원들의 정책성향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다. 그렇지만 14개의 정책사항별로 현직 자민당 의원들이 응답한 결과들로부터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이 결과와 아베 수상이 강조해온 정책들의 방향과 특성을 비교한다면, 두 번째 가설을 실증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일본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선행 연구의 사례로 1998년 일본의 가바시마(蒲島郁夫) 교수팀이 진행한 중의원 및 참의원 국회의원들의 정치이념에 대한 실증분석이 있다.<sup>8)</sup> 또한 2003년 총선부터 아사히신문사와 마이니치신문사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보도되고 분석되면서 이에 관련한 보도가 크게 증가했다. 해당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실시된 2014년 제47회 총선 후보자와 2013년 제23회 참의원 후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가 일반 공개되고 있다.<sup>9)</sup> 이 설문조사에는 선거시점에 이슈가 되는 주요 정책 사항들이 조사

8) 東大法・蒲島郁夫ゼミ 編, 『現代日本の政治家像』 第I巻, 木鐸社, 2000.

9) <http://www.masaki.j.u-tokyo.ac.jp/utas/utasp.html>

항목으로 포함된다. 선거 당선자들의 정책성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설문을 연속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선거시점의 개별 당선자들의 정책 성향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의 당선자들의 집계된 정책성향과 그 변화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의 연구로는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역사수정주의, 신안보정책 등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많다.<sup>10)</sup> 1990년대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도 존재한다(김호섭외 3인 2000). 일본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을 실증 분석한 국내연구로서 선행 연구도 존재한다. 2003년, 2005년, 2009년, 2012년 총선 당선자들의 정책성향을 비교 분석한 사례가 있다.<sup>11)</sup> 이 연구는 아사히신문사와 동경대 다니구치 교수의 공동조사 자료를 활용했고, 일부 마이니치신문사 조사자료도 활용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의원 의원들의 정책성향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총선 당선자와 2010년과 2013년 참의원 의원을 추가해 분석했다. 또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아베 수상의 영향력의 방향과 그 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추가했다.

## 2. 분석대상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앞서 기술했듯이 현직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들의 구체적인 정책성향이다. 즉 2014년 총선에서 당선된 중의원의원 475명과 2010년과 2013년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각각 당선된 242명의 의원들의 개별적인 정책성향을 분석한다. 이분석을 통해 일본의 국회의원들의 보수성향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민·민주 양당 의원들

10)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면, 김준섭(2013), 박영준(2014), 남궁영·김준영(2012), 조양현(2007), 이정환(2014) 등을 들 수 있다(참고문헌 참조).

11) 이이범, 「2000년대 일본 국회의원들의 보수성향에 대한 실증 분석」, 『일본연구』 제62호, 2014.

의 정책성향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데이터는 아사히신문사와 다니구치(谷口將紀) 교수가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책성향을 주로 파악하기 위해 공동조사한 자료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정책항목들은 다음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의원 의원의 분석에서는 2005년, 2009년, 2014년 당선자를 모두 분석했다. 2005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자민당 의원수가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2009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크게 증가했다. 세 차례의 당선자들의 정책성향을 비교함으로써, 중의원 의원들의 강경 보수적인 정책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직인 2010년과 2013년 참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정책성향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했다. 데이터 분석은 먼저, 각 정책 사항별로 자민당과 민주당 의원을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했고,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도 응답 항목별 빈도수를 집계해 선거 당선자 전체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분석을 통해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한다.

<표 2> 분석대상의 정책 사항

분야	분석대상 조사항목	중의원			참의원	
		05	09	14	10	13
정치 이념	① 정책성향의 위치 (강한 진보부터 강한 보수까지 1~10 측정)	○	-	○	-	○
외교 안보 분야	① 헌법은 개정해야 하는가	○	○	○	○	○
	② 방위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	○	○	○
	③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한 내각 결정을 (높게) 평가하는가	○	○	○	○	○
	④ 타국의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공격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	○	○	-	○
	⑤ 헌법 제9조 개정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	○	○	-	○
	⑥ 일본의 외교우선순위는 먼저 A '미국'인가 B '아시아'인가 <sup>12)</sup>	-	12	○	○	○
국제 경제 분야	① 국내산업 보호해야 하나, 무역이나 투자의 자유화를 진전시켜야 하나	-	○	○	○	○
	②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진전시켜야 한다	-	○	○	○	○

국내 사회 분야	① 치안을 지키기 위해 프라이버시나 개인권리가 제약되는 것은 당연하다	○	○	○	○	○
	② 도덕교육을 더욱 충실화해야한다	-	-	○	○	○
	③ 정주의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	○	○	○	○
	④ 수상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기를 원한다	-	-	○	-	○
	⑤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를 수정해야 하나	-	-	○	-	-
	⑥ 종군위안부에 대한 구일본군의 관여 인정한 고노담화 수정해야 하나	-	-	○	-	-

또한 정책이념을 제외한 14개 정책에 대한 자민당 의원들의 응답결과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각 정책별 응답 내용의 공통요인을 추출했다. 이 공통 요인은 14개의 정책들이 현직 의원들의 보수-리버럴 성향을 잘 반영하는 것들인 만큼, 보수 성향들의 유사성 내지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출된 방향성이 아베 수상이 강조해온 핵심적인 정책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직 의원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아베수상의 핵심적인 정책성향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두 번째의 가설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정책 사항은 정치이념을 포함해 외교안보분야 6개, 국제경제분야 2개, 국내사회분야 6개 항목 등 모두 15개 항목이다. 이 정책들은 일본 국내에서 보수-진보<sup>13)</sup> 세력 간의 정책적 대립이 명확한 이슈들이다. 이 정책들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 의견은 개별 의원들의 정치 성향 내지 보수-진보의 스펙트럼에서 분석하기 적절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15개의 항목 가운데, 헌법 제9조 개정, 무라야마담화 수정, 고노담화수정 등 3항목은 아사히신문사의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외적으로 마이니치신문사 조사자료를 활용했다.<sup>14)</sup> 정책사항에 따라서는

12) 본 정책의 중의원의원 조사는 2012년과 2014년에만 실시되어 이들 데이터를 분석함.

13) 일본의 정치세력을 정치이데올로기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리버럴-보수 또는 좌-우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익상 보수-진보로 구분한다.

분석 대상 선거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총선 당선자들만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의원들의 보수성향의 수준이 일반인들의 수준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와 함께 분석했다. 여기서 이용한 일반 여론조사 자료는 앞서 기술한 아사히신문사와 다니구치(谷口將紀) 교수가 공동 조사한 2012총선 및 2013참의원선거 유권자조사의 데이터<sup>15)</sup>를 이용했다. 조사된 정책 항목 가운데, 두 선거에서 동시에 조사된 경우는, 최신 조사 결과를 우선하여 2013년 데이터를 활용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가운데, 마이니치신문의 조사내용을 활용한 정책 항목은, 별도의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했다.<sup>16)</sup>

### Ⅲ. 분석결과

#### 1. 정책이념의 분석

이 자료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이념을 좌-우의 1(가장 좌편)~10(가장 우편) 단계로 구분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념의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2014년 총선과 2013년 참의원선거 당선자들의 분포를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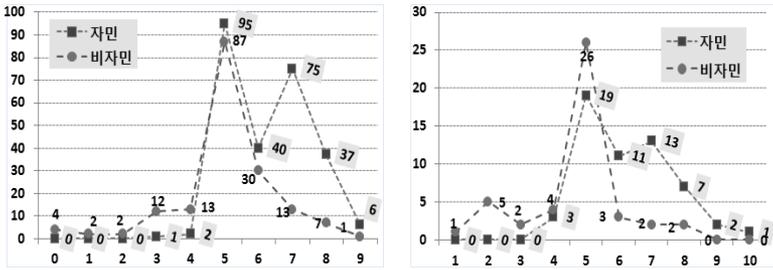
---

14) 마이니치신문사 데이터는 응답 선택을 찬성과 반대만의 양자 택일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15) 2012年衆院選-13年参院選世論調査(<http://www.masaki.j.u-tokyo.ac.jp/utas/utasv.html>)

16) 일반인의 여론조사 데이터는 질문내용의 표현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질문의 목적과 응답의 방향이 국회의원 조사 내용과 목적에 일치하는 것들만 선택했다는 점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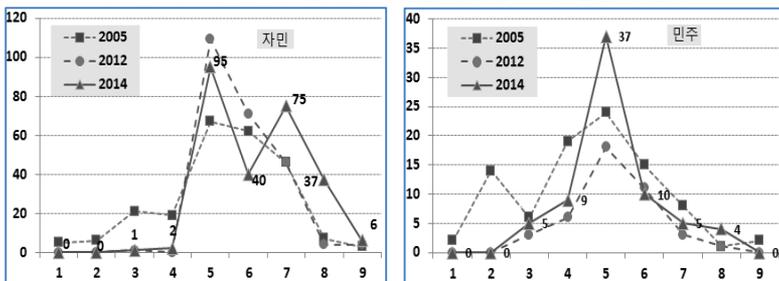
〈그림 2〉 2014년 총선 및 2013년 참의원 당선자의 정책이념의 분포



자민당 의원들과 그 외 의원들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민당 중의원의원들은 강한 보수 성향인 6~9 수준에 응답자 256명 가운데 158명이 포함되어 전체의 61.7%에 이른다. 그 외 의원들의 6~9 수준의 비율은 전체 171명 가운데 51명으로 29.8%였다. 2013년 참의원 당선자들 가운데 보수 6수준 이상의 비율을 보면, 자민당 의원들은 56명 가운데 34명으로 60.7%였다. 그 외의 의원들은 전체 45명 가운데 15.5% 정도였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자민당의 2014년 총선과 2013년 참의원 당선자들 간의 강경 보수 성향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5년, 2012년, 2014년 자민-민주 양당의 총선 당선자들의 강경 보수 성향의 비율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다음의 〈그림 3〉은 2005년, 2012년, 2014년 총선에서 당선된 양당 의원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 자민-민주 중의원 의원들의 강경 보수 성향의 변화



2005년과 2014년 자민당 당선자들을 비교하면, 2005년에 당선되었던 진보<sup>17)</sup>성향(1~4)의 의원들 51명 정도가 2014년 총선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강경 보수 성향(7~9)의 의원들은 2005년 56명에서 1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민주당의 경우는 2014년 당선자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2005년과 비교하는 의미가 약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도 진보 성향(1~4)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성향

### 1) 헌법개정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 분포를 보면, 2014년 당선자 가운데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아져 응답자의 84.4%가 찬성했다. 2014년 자민당 당선자는 응답자 268명 전원이 찬성이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61.6%가 찬성했고 반대는 21.9%였다.

참의원 의원들을 보면, 2010년 당선자보다는 2013년 당선자의 찬성 비율이 좀더 높았고, 반대자의 비율도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총선 당선자의 찬성 비율이 비교적 낮고 반대 비율이 높았던 것은, 민주당이 압승해 민주당 의원의 비율이 높아졌고 자민당 의원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찬성 비율은 2013년 참의원선거 때의 조사결과를 보면, 44.0%였고, 반대는 23.9%였다.

---

17) 설문조사 표현에서는 좌-우의 입장이라고 표현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진보-보수로 옮겨 표현함.

〈표 3〉 헌법 개정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05	2009	2014	2005	2009	2014	2005	2009	2014	2010	2013	
찬성	87.2	74.8	78.3	50.0	16.4	20.5	71.8	31.5	59.5	37.6	54.4	17.6
찬성하는편	9.5	20.7	18.8	22.6	30.0	41.1	15.3	27.6	24.9	33.0	19.3	26.4
어느쪽도아님	1.5	2.7	2.9	12.3	31.0	16.4	4.5	21.8	5.7	14.7	5.3	32.1
반대하는편	1.5	1.8	0.0	7.5	13.2	12.3	3.2	9.4	3.1	3.7	7.9	12.7
반대	0.4	0.0	0.0	7.5	9.4	9.6	5.2	9.7	6.8	11.0	13.1	11.2
N	274	111	276	106	287	73	444	445	457	109	114	1,520

## 2)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2005년 당선자들은 34.9%가 지지했고 40.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14년 당선자들은 68.9%가 지지했고 27.4%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민당 의원들만 보면, 2014년 당선자들은 97.1%가 찬성했고, 반대는 1.1%(3명)에 불과했다. 참의원의 전체 의원을 보면, 2010년 당선자의 48.1%가 지지했고, 2013년 당선자는 49.5%가 지지했다. 전체적으로 중의원 의원들의 지지율이 참의원 의원들의 지지율을 앞섰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해서 현직 자민당 중의원 의원들은 거의 모두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각의결정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05	2009	2014	2005	2009	2014	2005	2009	2014	2010	2013	
찬성	19.7	32.7	60.4	6.5	5.7	0.0	14.2	12.3	39.6	12.3	27.4	14.0
찬성편	29.0	44.5	36.7	9.3	13.8	4.1	20.7	20.3	29.3	35.8	22.1	24.8
어느쪽도아님	28.6	20.0	1.8	20.6	36.9	6.8	24.4	29.7	3.7	12.8	22.1	40.7
반대편	13.9	2.7	0.7	21.5	19.5	23.3	15.8	15.3	6.8	16.5	4.4	10.7
반대	8.9	0.0	0.4	42.1	24.1	65.8	24.9	22.4	20.6	22.0	23.9	9.8
N	259	110	278	107	282	73	430	438	457	109	113	1,483

2013년 참의원 선거 때의 일반인들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각의결정에 대한 찬성 비율이 38.8%이고, 반대 비율은 20.5%, 그리고 유보적인 태도가 40.7%에 달했다.

### 3) 방위력 증강

자위대의 방위력 증강에 대하여 현직 중의원 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각각 72.1%와 9.1%로 나타났다. 2005년 당선자의 찬성 비율이 53.1%였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자민당 당선자들을 보면 찬성 비율이 90.3%였고, 민주당당선자들은 51.3%였다. 참의원의원들의 경우도 2013년 당선자는 66.7%가 찬성했다.

2013년 선거 때의 일반인들은 54.2%가 찬성했고, 반대는 14.1%였다. 어느쪽도 아닌 비율은 31.7%였다.

〈표 5〉 방위력 증강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05	2009	2014	2005	2009	2014	2005	2009	2014	2010	2013	
찬성	22,6	34,2	56,0	7,5	5,9	8,3	16,3	13,3	37,7	20,2	39,3	23,4
찬성하는편	42,3	36,0	34,3	29,9	18,8	43,0	36,8	22,0	34,4	28,4	27,4	30,8
어느쪽도아님	29,8	30	8,3	31,8	44,6	34,7	30,1	38,0	18,7	31,2	19,7	31,7
반대하는편	3,8	2,7	1,4	15,9	16,4	6,9	7,6	13,3	2,6	9,2	2,6	9,0
반대	1,5	0,0	0,0	15,0	14,3	6,9	9,2	13,5	6,5	11,0	11,1	5,1
N	265	111	277	107	287	72	435	445	459	109	117	1,511

### 4) 선제공격

아베내각은 안전보장 관련법들이 성립되면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선제공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 선제공격의 문제는 현행 평화헌법 하에서는 수용되기 어렵고 일본의 방위정책에서도 전략상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표 6〉 선제공격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09	2014	2009	2014	2009	2014	2013	2013
찬성	11.2	6.2	3.9	1.4	5.3	4.4	6.0	10.3
찬성하는편	33.6	21.2	11.3	16.9	17.2	17.8	24.8	20.6
어느쪽도아님	39.3	64.1	38.7	33.8	36.6	51.5	28.2	37.5
반대하는편	12.1	4.8	22.2	19.7	18.8	10.2	10.3	19.1
반대	3.7	3.7	23.9	28.2	22.2	16.1	30.8	12.6
N	107	273	284	71	437	454	117	1,498

일본이 '타국의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공격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현직 중의원 의원의 22.2%는 찬성하고 26.3%는 반대했다. 2009년 총선 당선자들과 비교하면 찬성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고, 반대 비율은 감소했다. 자민당 의원들을 비교하면, 2009년 당선자 가운데 응답자의 44.8%가 찬성했지만, 2014년 응답자 가운데 찬성 비율은 27.4%로 오히려 낮아졌다. 그리고 반대 비율은 2009년 15.8%에서 2014년 8.5%로 낮아졌다. 눈에 띄는 것은 태도 유보 비율이 39.2%에서 64.1%로 크게 증가한 점이다. 2013년 당선된 참의원 의원들은 30.8%가 지지했고 반대 비율은 41.1%였다. 2013년 참의원 선거 때의 일반인들의 응답은 30.9%가 찬성, 31.7%가 반대였으며, 유보 비율은 37.5%였다. 일반인들의 찬성비율은 2013년 참의원 당선자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4년 자민당 당선자들보다도 높았다.

### 5) 헌법 제9조 개정

일본의 헌법개정과 세력들이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제9조에서 규정한 전쟁포기, 군대보유와 교전권의 부인을 수정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2014년 총선 당선자들은 제9조 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67.6%와 32.4%였다. 2009년 당선자들과

비교하면 찬성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자민당 당선자들을 보면 찬성 비율이 95.1%였다. 2013년 참의원 당선자들은 찬성이 53.1% 반대가 32.1%였다.

2013년 참의원 선거 때의 일반인들의 응답을 보면, 제9조의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43.0%, 반대 29.2%로 찬성 비율이 높았고, 의견보류 비율은 27.8%였다.

〈표 7〉 제9조 개정<sup>18)</sup>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09	2014	2009	2014	2009	2014	2013	2013
찬성	83.6	95.1	32.0	14.7	38.9	67.6	53.1	43.0
어느쪽도아님	-	-	-	-	-	-	14.8	27.8
반대	16.4	4.9	68.0	87.3	61.1	32.4	32.1	29.2
N	67	247	253	55	365	393	115	1,519

\* 중의원 자료는 마이니치신문사의 자료, 참의원 자료는 아사히신문사의 자료임.

## 6) 일본 외교의 우선순위

일본 외교의 우선순위를 미국으로 할 것인가 아시아국가들로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이다. 2000년대 들어 미일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동아시아의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는 미일동맹 강화론자가 주류였지만, 동아시아의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4년 총선 당선자들의 의견은 53.1%가 미국을 선택했고, 아시아를 선택한 비율은 12.3%였다. 2012년 당선자들과 비교하면, 미국을 선택한 비율은 크게 감소했고 아시아를 선택한 비율은 약간 증가했다. 2014년 자

18) 마이니치신문사 조사에서는 응답선택 항목을 찬성, 반대만을 제시하여 양자택일 응답이었고, 아사히신문사 조사에서는 찬성, 찬성하는 편, 어느 쪽도 아님, 반대하는 편, 반대 등 5가지 항목의 선택이었다. 찬성과 찬성하는 편은 찬성으로, 반대와 반대하는 편은 반대로 각각 묶었다.

민당 당선자들은 38.9%가 미국을 선택했고 아시아를 선택한 의원은 4.9%에 불과했다. 참의원 의원들의 경우는 2013년 당선자의 54.8%가 미국을 선택했고, 아시아를 선택한 당선자는 18.2%였다.

2012년 총선 때의 일반인들은 42.5%가 미국을 선택했고, 아시아를 선택한 비율은 26.9%였다. 유보비율은 30.6%였다. 국회의원들이나 일반인들 모두 아시아보다는 미국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크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본 외교의 우선순위는 미국인가 아시아인가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12	2014	2012	2014	2012	2014	2010	2013	
미국	34.6	20.6	12.7	5.6	25.5	16.1	12.1	16.5	14.2
미국의 편	44.1	38.6	47.3	33.3	46.5	37.0	27.1	38.3	28.3
어느쪽도 아님	16.5	36.0	30.9	45.8	19.9	34.8	37.4	27.0	30.6
아시아의 편	4.4	4.5	7.3	12.5	6.0	9.8	21.5	7.8	21.2
아시아	0.4	0.4	1.8	2.8	2.0	2.5	1.9	10.4	5.7
N	272	267	55	72	447	449	107	115	1,900

### 3. 국제경제 분야

#### 1) 국내산업 보호인가 무역·투자의 자유화인가

2014년 당선자들은 31.8%가 국내산업의 보호를 우선하는 것을 선택했고, 24.1%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것을 선택했다. 2009년 당선자들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31.8%가 선택했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19.5%가 선택했다. 국내산업의 보호조치를 우선하는 의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10년 참의원 당선자들은 2013년 당선자들에 비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지지 비율이 높았다.

〈표 9〉 산업보호인가 무역투자 자유화인가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2012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09	2014	2009	2014	2009	2014	2010	2013	
산업보호	6.3	4.5	5.2	1.4	7.2	8.3	7.3	12.1	24.1
산업보호편	37.8	24.1	35.0	27.4	34.8	23.5	29.4	33.6	38.5
어느쪽도아님	33.3	50.9	40.6	34.2	38.6	44.1	40.4	28.4	22.6
자유화편	19.8	12.4	17.1	22.5	17.2	19.5	18.3	16.4	10.7
자유화	2.7	2.4	2.1	8.2	2.3	4.6	4.6	9.5	4.0
N	111	274	286	72	443	456	109	116	1,833

2013년 참의원 당선자들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우선하는 비율이 중의원 의원들에 비해 더욱 높아 45.7%에 달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아베내각이 TPP(아시아태평양동반자협정)의 가입을 결정한 만큼, 현직 국회의원들의 국내산업보호의 명분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총선 때 조사된 일반인들의 응답은 국내산업 보호를 지지하는 비율이 62.6%였고 자유화를 지지하는 비율은 14.7%였다. 국회의원들에 비해 산업보호론의 찬성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이면서 총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으로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에 대해 2014년 총선 당선자들의 응답자 가운데 27.5%가 지지했지만 32.0%는 반대했다. 2009년 당선자들과 비교하면, 찬성 비율은 감소했고 반대 비율은 증가했다. 2013년 참의원 의원들의 찬성 비율은 36.9%로 반대 비율 18.3%의 2배에 달했다. 2004년 단순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일본인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자세는 국회의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가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09	2014	2009	2014	2009	2014	2010	2013	
찬성	3.6	1.5	6.3	1.4	6.7	2.0	3.6	4.3	6.2
찬성편	26.1	20.5	27.4	31.5	27.1	25.5	33.6	32.2	16.4
어느쪽도아님	46.8	37.7	45.1	39.7	45.3	40.4	49.1	45.2	45.3
반대편	18.0	15.4	18.8	21.9	17.7	16.0	12.7	12.2	23.0
반대	5.4	24.5	2.4	5.5	3.1	16.0	0.9	6.1	9.1
N	111	273	288	73	446	455	110	115	1,837

#### 4. 국내사회 분야

##### 1) 치안을 위한 개인 권리의 제약

치안을 지키기 위해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권리가 제약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항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이라면, 개인의 권익보다는 국가나 사회 전체의 치안을 우선할 것이다.

이 질문에 2014년 당선자들의 28.0%는 찬성했고 32.1%는 반대했다. 2005년 당선자와 비교하면, 찬성 비율은 감소했고 반대 비율은 증가했다. 2014년 당선자들이 2005년 당선자들에 비해 개인의 권익 보호에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의 2014년 총선 당선자들을 보면, 찬성 비율은 41.2%였고, 반대 비율은 10.4%였다. 2005년 자민당 당선자들의 찬성 비율은 41.3%였고 반대 비율은 10.4%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비율이 9.6%, 반대 비율이 57.5%인 것과 대조적이다. 자민당 의원들이 개인의 권익보다는 국가나 사회 전체의 치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당선된 참의원 의원들을 보면, 개인의 권리 제약에 찬성하는 비율이 16.6%였고 반대하는 비율은 34.2%로 반대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았다.

2012년 총선 때의 일반인들의 응답에서는 찬성이 47.8%, 반대는 19.2%였다. 찬성 비율은 2014년 자민당 당선자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 11〉 치안을 지키기 위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제약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05	2009	2014	2005	2009	2014	2005	2009	2014	2010	2013	
찬성	12.0	5.4	6.0	2.7	1.4	0.0	8.2	2.5	3.6	2.8	2.6	17.7
찬성편	36.7	42.3	35.3	13.6	10.7	9.6	27.9	18.3	24.4	13.8	14.0	30.1
어느쪽도아님	41.6	40.5	48.3	34.5	41.7	32.9	39.0	40.6	39.9	56.9	49.1	33.1
반대편	8.6	10.8	8.9	30.0	33.1	37.0	15.9	25.7	21.5	15.6	17.5	12.2
반대	1.1	0.9	1.5	19.1	13.1	20.5	9.1	12.9	10.6	11.0	16.7	7.0
N	267	111	269	110	290	73	441	448	451	109	114	1,841

## 2) 도덕교육의 충실화

학교의 정규교과 과정의 하나로 도덕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질서와 가치관을 중시하는 자민당 정권에게는 중요한 교육정책의 하나이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사회규범이 흔들리고 이지메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 아베 내각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도덕교육’을 특별교과로 격상시켜 전임교사를 배치하고 문부과학성이 검정한 교과서로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다.<sup>19)</sup> 이에 대해 검정교과서의 도입으로 오히려 다양한 생각을 교육시킬 기회가 상실되고, 도덕교육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딱딱한 교육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sup>20)</sup>

학교 교육에서 도덕교육을 충실화하는 것에 대해 2014년 총선 당선자는 72.3%가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8.7%였다. 자민당 의원들은 전체 277명 가운데 93.8%가 찬성했고, 반대자는 없었다. 2013년 참의원 당선자들의

19) 제2차 아베내각에서는 내각의 최중요과제의 하나로 2013년 1월 내각의결로 21세기 일본에 적합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재생실행회의’를 설치하였고, 그 가운데 유식자회의를 개최하여 개혁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지메문제에 대한 대책, 교육위원회제도 등의 운영안, 학제운영방안, 지방창생을 실현하는 교육의 방안, 교사의 역할과 자세, 교육투자·교육재원의 방안 등 8차례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https://www.kantei.go.jp/jp/singi/kyouikusaisei/teigen.html>, 검색일: 2015년 10월 31일).

20) 2013년 12월 3일 「時論公論」 「道徳を教科にするのはなぜ?」, <http://www.nhk.or.jp/kaisetsu-blog/100/174520.html> (검색일: 2015년 10월 29일)

찬성 비율은 73.5%로 2014년 총선 전체 당선자의 찬성 비율과 비슷했다.

2012년 총선 때의 일반인들의 응답은 찬성이 79.5%였고, 반대는 3.2%에 불과했다.

〈표 12〉 도덕교육 충실화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12	2014	2012	2014	2012	2014	2010	2013	
찬성	68.5	62.8	19.6	8.2	52.4	42.2	38.5	41.0	42.9
찬성편	29.3	31.0	53.6	34.2	36.9	30.1	39.4	32.5	36.6
어느쪽도아님	2.2	6.1	19.6	37.0	8.2	19.0	13.8	17.9	17.2
반대편	0.0	0.0	7.1	15.1	2.0	7.2	4.6	5.1	2.2
반대	0.0	0.0	0.0	5.5	0.4	1.5	3.7	3.4	1.0
N	276	277	56	73	452	459	109	117	1,832

### 3)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인정

일본에서 특별 영주의 거주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sup>21)</sup>에게 지방 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한 조사이다. 그 동안 민주당, 공명당, 사민당, 일본공산당 등의 의원들이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했다. 그러나 자민당 의원들의 반대로 대부분 심의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폐안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하토야마 내각과 간 내각에서 내각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으로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 운동과 압박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21) 1991년 시행된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에 따라 거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인,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1945년9월2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평화조약국적이탈자(조선인 및 대만인)와 그 자손이 주 대상임.

〈표 13〉 외국인 지방참정권 인정

응답항목	중의원									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2005	2009	2014	2005	2009	2014	2005	2009	2014	2010	2013	
찬성	8,6	0,9	0,0	25,7	33,4	8,2	20,9	28,2	9,4	15,6	18,8	13,4
찬성편	15,4	6,3	0,7	30,3	33,4	28,8	18,0	25,1	10,0	14,7	6,0	28,0
어느쪽도아님	32,2	38,7	10,0	22,0	20,7	28,8	26,1	24,4	12,9	13,8	17,9	33,6
반대편	22,5	26,1	19,6	10,1	5,9	17,8	18,2	10,5	20,0	6,4	8,5	11,0
반대	21,3	27,9	64,6	11,9	6,6	16,4	16,8	11,9	47,7	49,5	48,7	13,9
N	267	111	276	119	290	73	440	447	459	109	117	1,850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은 2014년 당선자의 경우 찬성 19.4%, 반대 67.7%였다. 2005년 당선자와 비교하면, 찬성 비율은 19.5% 감소했고, 반대 비율은 32.7%나 증가했다. 2014년 자민당 당선자들을 보면, 반대 비율은 84.2%에 달했다. 2013년 참의원 당선자들도 찬성 비율이 24.8%, 반대 비율은 57.2%였다.

2012년 총선 때의 일반인들의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41.4%, 반대 비율은 24.9%였다.

#### 4)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일과 중일 정부 간의 주요한 갈등 요인이다. 일본의 강경 보수 세력은 수상의 신사참배는 기본적으로 일본 내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도 정경이 분리되고 있고, A급 전범이 합사된 특정 신사에 수상이 참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표 14〉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응답항목	2014 총선			2013참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전체	일본경제신문 <sup>22)</sup>
찬성	22,6	1,4	15,0	18,4	45%
찬성편	29,7	2,8	19,2	29,8	
어느쪽도아님	39,1	11,3	28,0	18,4	6%
반대편	7,5	22,5	13,9	3,5	43%
반대	1,1	62	23,9	29,8	
합계	266	71	447	114	1,053

수상의 참배에 대한 2014년 당선자들의 의견은, 찬성이 34.2%, 반대 37.8%로 반대 비율이 약간 높다. 자민당 의원의 경우, 찬성 비율은 266명 응답자 중 139명으로 52.2%이고 반대 비율은 22.5%였다. 2013년 참의원 당선자는 찬성이 48.2% 반대가 33.3%였다. 2014년 1월 조사된 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인의 45%는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적절했다고 응답했고, 43%는 부적절했다고 했다.

#### 5) 무라야마담화 및 고노담화의 수정

무라야마담화는 과거 식미지지배와 침략주의 역사에 대한 사죄를 담고 있고, 고노담화는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과거사의 침략성과 국가책임을 부인하는 강경 보수 세력들은 이 두 담화가 사실의 왜곡이며 날조된 것에 기초한 것들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라야마담화를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4년 총선 당선자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은 각각 32.4%와 67.6%였다. 자민당 의원들의 찬성 비율은 48.9%였다. 마이니치신문사가 2015년 1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

22) 日経定例(特別)電話世論調査, 2014년 1월 23~26일간 조사되었고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를 질의함. 적절하다는 응답을 찬성으로, 부적절한 것을 반대한 것으로 집계하였다(<http://www.nikkei-r.co.jp/phone/index.html> 검색일: 2015년 10월 27일).

면, 일반인들은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계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다 같이 34%였다.

〈표 15〉 무라야마 및 고노 담화 수정

응답항목	무라야마 담화 수정				고노담화 수정			
	2014 중의원			여론조사	2014 중의원			여론조사
	자민	민주	전체	마이니치 <sup>23)</sup>	자민	민주	전체	시사통신 <sup>24)</sup>
찬성	48.9	6.0	32.4	34.0	69.9	11.5	47.2	45.1
반대	51.1	94.0	67.6	50.0	30.1	88.5	52.8	32.6
N	220	67	392	1,012	215	61	379	

고노담화의 수정에 대해서는 2014년 총선 당선자들 가운데 응답자의 47.2%가 수정하여야 한다고 했고, 52.8%는 답습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2014년 11월 시사통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5.1%가 수정에 찬성했고, 32.6%는 답습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 5. 자민당 재선 이하 의원과 3선 이상 의원의 정책성향 분석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에서 2012년 및 2014년 총선을 거치면서 자민당 의원들의 강경보수 성향이 확산된 것에는,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한 강경보수 세력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특히 2014년 당선자 가운데, 아베 수상이 당 총재로서 후보 공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재선 이하의 의원들은 3선 이상의 의원들에 비해 강경보수 성향이 더욱 강한 인물들일 수 있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민당의

23) 마이니치신문사가 2015년 1월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수상의 전후 70년 담화에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0%, 계승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34%였음.

24) 시사통신사가 2014년 11월 여론조사에서 고노담화의 수정 여부에 관하여, 응답자의 45.1%는 수정하여야 한다고 했고, 32.6%는 답습하여야 한다고 응답함 (시사통신사 2014년 11월 14일자).

중의원 의원을 재선 이하와 3선 이상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 간의 정책성향의 차이를 비교했다.

먼저 재선 이하 그룹과 3선 이상 그룹의 평균값 차이가 사회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표 16〉 자민당의 재선이하와 3선이상 중의원 의원들의 평균값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정책항목	F값	t값	유의수준	정책항목	F값	t값	유의수준
헌법개정	1,566	1,057	0,291	외국인노동자수용	14,118	2,154	0,032
방위력강화	0,903	0,693	0,489	치안위한 인권제약	0,001	0,018	0,986
선제공격	3,371	-0,973	0,332	도덕교육 강화	0,797	0,643	0,521
집단적 자위권	1,878	-0,640	0,523	외국인참정권인정	4,259	0,905	0,366
미국 아시아인가	2,595	1,916	0,108	수상야스쿠니참배	12,951	-3,069	0,002
제9조 개정	1,361	-0,559	0,244	무라야마담화수정	8,878	-4,925	0,000
산업보호, 자유화	1,409	-0,587	0,557	고노담화수정	23,081	-4,690	0,000

실시 결과는 〈표 16〉에서 확인된다. 재선 이하와 3선 이상의 그룹 간의 평균값 차이가 5%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무라야마담화 수정, 고노담화 수정의 4개 항목이었다. 이들 4개 항목 이외의 정책성향에서는 재선 이하 그룹과 3선 이상의 그룹 간의 평균 값 차이는 사회통계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하의 〈표 17〉에서 14개 모든 항목에 대해 평균값을 비교했다.

〈표 17〉 재선 이하와 3선 이상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정책성향 비교

응답항목	헌법개정		방위력		집단적 자유권		선제공격		개인권리 제약		도덕교육 충실		헌법 제9조개정	
	2선 이하	3선 이상	2선 이하	3선 이상	2선 이하	3선 이상	2선 이하	3선 이상	2선 이하	3선 이상	2선 이하	3선 이상	2선 이하	3선 이상
찬성	81.4	81.2	72.0	68.1	69.5	64.2	22.3	20.5	26.9	26.2	72.5	68.1	56.0	56.0
반대	11.4	8.1	10.4	7.8	25.4	26.9	22.3	26.9	31.0	30.2	9.8	7.5	24.9	28.0
N	193	282	193	282	193	282	193	282	193	282	193	282	193	282

응답항목	외국인 참정권		외국인 노동자		야스쿠니참배	
	2선 이하	3선 이상	2선 이하	3선 이상	2선 이하	3선 이상
찬성	17.1	19.9	22.3	29.0	41.4	25.8
반대	68.4	49.6	35.8	27.3	31.1	38.6
N	193	282	193	282	193	282

응답항목	미국, B아시아		A산업보호, B무역투자 자유화	
	2선 이하	3선 이상	2선 이하	3선 이상
A에 가깝다	47.7	51.7	32.1	29.5
B에 가깝다	15.0	9.2	22.3	23.7
N	193	282	193	282

응답항목	고노담화수정		무라야마 담화수정	
	재선 이하	3선 이상	재선 이하	3선 이상
찬성	50.8	28.7	38.3	18.8
반대	32.6	48.6	45.1	63.1
N	193	282	193	282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재선과 3선 이상의 그룹으로 나눌 때, 14개 정책들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무라야마 담화 수정, 고노담화 수정의 정책들에서만 평균값의 차이가 의미 있는 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 연령과 이들 4개 항목 간의 상관성 분석을 해도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4개의 정책 항목에서는 재선 이하의 의원들은 일정 부분 아베 수상의 정책 성향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외교안보 분야와 국내 사회교육 분야의 정책에서의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

준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 IV. 가설검증

앞서 기술한 본 연구의 가설에서, 첫 번째 가설인 초선과 재선의원들은 최초의 자민당 공천이 아베 수상의 집권기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정치노선에 가까운 인물들이 대거 영입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의 검증은 앞선 결과분석에서 자민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3선 이상의 의원들보다 강경 보수 성향을 띤 정책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 등이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정책 사항에서는 아베 수상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안보외교 분야와 국내 사회교육 분야의 정책들에서는 아베 수상의 정책 노선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직 자민당 의원들이 대한 아베 수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 강화되었다는 가설은 일부 정책성향에서만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의 가설은 자민당 의원들의 정책성향이 아베 수상의 정책노선의 영향을 받았다면, 14개 정책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성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아베 수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 내용과 근접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먼저 14개 정책사항에 대한 자민당 의원들의 정책성향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공통적인 특성과 아베 수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의 핵심적인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가설의 입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8〉 14개 정책성향의 요인성분 분석 결과

회전된 성분행력	성분	
	1. 일본대국화	2. 역사전통의 존엄성
도덕교육충실화	.964	-.019
방위력 강화	.964	-.025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인정	.939	.028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결정	.926	-.010
선제공격	.883	.036
외국인노동자수용	.879	.019
A국내산업보호 B무역투자 자유화	.818	.027
치안위한 개인권리 제약 당연	.807	.098
일본외교순위 a미국 b아시아	.768	.082
헌법개정 찬반	.759	-.001
수상야스쿠니 참배	.753	.202
고노담화 수정	.045	.934
무라야마담화 수정	.042	.914
9조개정 찬반	.013	.370

먼저 14개의 정책별 자민당 중의원 의원들의 정책성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14개의 정책사항들의 상호 연관성을 이용하여 공통 성분을 추출해내기 위해 베리맥스법으로 회전분석했다.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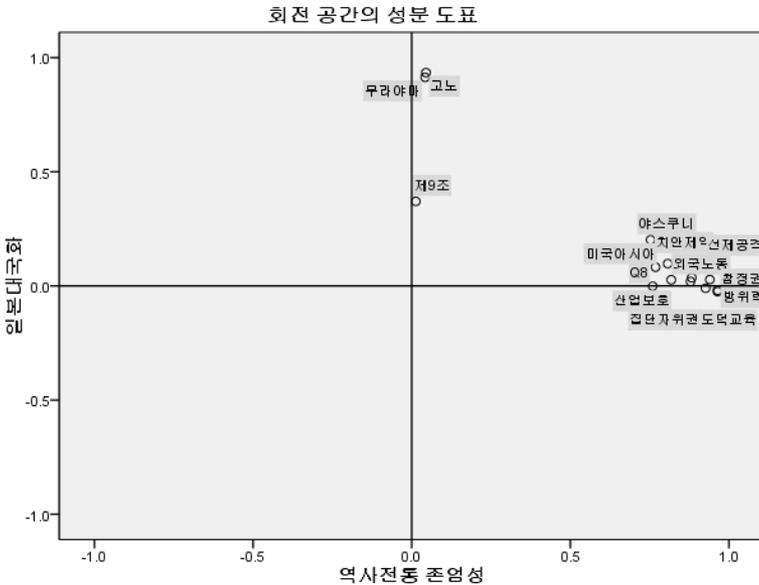
14개 정책 중 무라야마담화, 고노담화, 제9조개정을 제외한 11개 정책이 제1성분으로 묶어졌고, 제2성분으로는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가 묶여졌다. 1, 2성분의 회전 제곱합 적재값의 누적은 72.2%가 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제1성분으로 묶인 11개 정책성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제2성분으로 묶여진 고노담화 수정과 무라야마담화 수정에 공통하는 특성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제1의 공통성분을 ‘일본대국화’로 규정했고, 제2 공통성분으로는 ‘일본의 역사전통의 존엄’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베 수상이 강경 보수 노선의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2012년 총선 때 아베 총재가 자민당 매니페스토에서 강조했던 것이 강한 일본을 되돌린다는 것이었고, 강한 일본에 필요한 강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베

노믹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베 수상이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강조하는 가장 큰 목표도, 일본의 과거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이런 분석 결과를 보면,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도 강한 보수적인 정책 성향을 띠면서, 그러한 정책성향의 저변에는 아베 수상의 주장과 비슷하게, 강한 일본을 지향하고 과거의 암울한 침략 역사를 희석시키고 일본인들의 자존심과 존엄심을 되찾으려는 사상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추출한 성분을 좌표로 해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위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법을 이용해 <그림 4>와 같이 출력했다.

<그림 4> 공통성분의 회전공간에서의 각 정책성향의 위치



14개의 정책들이 두 개의 공통 성분, '일본의 대국화'와 '역사전통의 존엄성'의 좌표에 따라 위치한 것을 보면, 일본의 대국화 성향이 강하고 역사전통의 존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안보외교를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안정과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정책들이 집중되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역사전통의 존엄성의 축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을 지지하는 정책성향이 위치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정책들 가운데, 공통적인 요인을 공유하고 있는 정책군들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민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정책성향은 아베 수상이나 특정 그룹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는 의원들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것은 일본 의원들의 정책성향의 보수화가 아베 수상의 임기 중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아니고, 2005년, 2009년, 2012년, 2014년 총선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표 19>은 강경 보수 노선의 정책 성향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7개 정책에 대한 자민당 당선자들의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표 19> 2005, 2009, 2012, 2014 자민당 당선자의 보수적 정책성향의 변화

정책항목	2005총선당선자		2009총선당선자		2012총선당선자		2014총선당선자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방위력증강	2.19(0.882)	265	1.98(0.85)	111	1.38(0.56)	277	1.55(0.70)	277
선제공격	2.71(1.04)	266	2.64(0.96)	107	2.68(0.87)	273	2.78(0.78)	273
집단적 자위권행사	2.63(1.20)	259	1.93(0.79)	110	1.33(0.55)	276	1.44(0.60)	278
치안위한 인권제약	2.50(0.85)	267	2.59(0.79)	111	2.43(1.00)	274	2.65(0.78)	269
외국인참정권인정	3.33(1.21)	267	3.74(0.97)	111	4.68(0.64)	277	4.56(0.70)	276
외국인노동자 수용	-	-	2.95(0.89)	111	3.14(0.84)	276	3.40(1.12)	273
도덕교육 충실화	-	-	2.84(0.59)	110	1.34(0.51)	276	1.43(0.60)	277

\* 각 항목별 척도값은, 1=찬성, 2=찬성하는편, 3=어느쪽도아님, 4=반대하는편, 5=반대로 동일함.

이 분석에서 확인되는 것은, 예를 들어 방위력증강, 집단적 자위권, 외국인참정권, 도덕교육 충실화의 4항목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보수 성향이 강화되었지만, 2014년에는 약간 완화되었다. 선제공격은 2005년에서 2009년은 보수 성향이 강화되었지만, 2012년부터는 완화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의 정책 성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안위한 인권제약은 2009년은 완화되고, 2012년은 강화되고 2014년은 완화되는 등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민당 중의원 의원들에게 나타나는 정책의 보수 성향은 정책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2005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방위력증강, 집단적 자위권, 외국인참정권은 보수 성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선제공격은 오히려 보수 성향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도덕교육 충실화는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게 보이는 정책 성향의 보수화 현상은 정책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보수화의 양상은 단순하지 않고 특정한 시기에 집중해서 나타난 것도 아닌 것 같다. 또한 특정한 성향의 정치 그룹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선제공격의 정책 성향처럼 국내외의 특별한 환경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일본 국회의원들의 강경 보수 성향은 2005년, 2009년, 2014 총선 당선자들과 2010년과 2013년 참의원 당선자들의 정책성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확산되고 증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민당 의원

들의 경우는 일반인들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의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여러 정책성향에서 확인되었다. 또 한편으로 일반인들의 보수 우경화 성향도 과거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본의 의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확산된 강한 보수 성향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정책 사항들이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면서 안보외교 분야, 국내 사회경제 분야의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아베 수상의 강경 보수 성향이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는 일부분은 확인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자민당 의원들의 정책성향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아베 수상이 강조하는 강한 일본, 일본의 과거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한 것들과 유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요소가 자민당 의원들의 정책성향을 보수 우경화의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요소의 영향은 정책 항목별로 다르고 또한 시점이 달라지면 변화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아베 수상의 정책성향이 자민당 의원들의 정책성향을 선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베 수상이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을 수렴해 정책화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日本空聞

논문 투고일 : 2015년 10월 25일

논문 심사일 : 2015년 10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12월 6일

## 참고문헌

- 이이범, 「일본 중의원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0집, 2010.
- 이이범, 「2000년대 일본 국회의원들의 보수성향에 대한 실증 분석」, 『일본연구』 제62호, 2014.
- 김준섭, 「미일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안보정책」, 『국방연구』 56권 4호, 2013.
- 남궁영·김준영, 「탈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정책」, 『세계지역연구논총』 30권 1호, 2012.
-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국방정책연구』 103권, 2014.
- 이정환, 「현대일본의 보수화 정치변동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의정연구』 제41호, 2014.
- 조양현 「일본 중의원 국회의원들의 정책성향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0집, 2000.
- 조양현, 「아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한일군사문화연구』 5권, 2007.
- 河野啓·小林利行, 「再び政権交代を選択した有権者の意識: 「衆院選後の政治意識・2013」調査から」, 『放送研究と調査』 2013年7月号, 2013.
- 蒲島邦夫·山本耕資, 「2005年東京大学・朝日新聞社共同政治家調査コードブック」, 『日本政治研究』 第5巻第1・2合併号, 2008.
- 東大法·蒲島郁夫ゼミ編第I巻, 『現代日本の政治家像』, 木鐸社, 2000.
- 総務省自治行政局選挙部, 『第43回衆議院議員総選』, 2004.
- 総務省自治行政局選挙部, 『第44回衆議院議員総選』, 2006.
- 総務省自治行政局選挙部, 『第45回衆議院議員総選』, 2010.
- 総務省自治行政局選挙部, 「衆議院議員総選挙・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結果調」, 2012.
- 総務省自治行政局選挙部, 「衆議院議員総選挙・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結果調」, 2014.
- 総務省自治行政局選挙部, 第22回参議院議員通常選挙 速報結果,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data/sangiin22/index\\_1.html](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data/sangiin22/index_1.html) (검색일: 2015년 8월 30일).
- 総務省自治行政局選挙部, 第23回参議院議員通常選挙結果調: <http://www.soumu>.

go.jp/senkyo/senkyo\_s/data/sangiin23/index.html (검색일: 2015년 9월 20일).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 「2005年衆院選候補者調査」: <http://www.masaki.j.u-tokyo.ac.jp/utas/utasp.html> (검색일: 2015년 10월 2일).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 「2005年衆院選候補者調査」, 2005.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 「2009年衆院選候補者調査」, 2009.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 「2010年参議院議員・参院選候補者調査」, 2010.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 「2012年衆院選候補者調査」, 2012.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 「2013年参議院議員・参院選候補者調査」, 2013.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 「2014年衆院選候補者調査」, 2014.

日経定例電話世論調査, <http://www.nikkei-r.co.jp/phone/results/> (검색일: 2015년 10월 30일).

NHK政治意識月例調査, <http://www.nhk.or.jp/bunken/yoron/political/index.html> (검색일: 2015년 10월 30일).

内閣府, 「外国人労働者の受入れに関する世論調査」, <http://survey.gov-online.go.jp/h16/h16-foreignerworker/index.html> (검색일: 2015년 10월 31일).

内閣府, 「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 <http://survey.gov-online.go.jp/h26/h26-bouei/zh/z09.html> (검색일: 2015년 10월 31일).

Abstract

## The Analysis of Japanese Lawmakers' Conservative Orientations under Abe Regime

Lee, Rhee-Be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conservative tendencies of Japanese Dietmen. To analyze them, Asahi Shimbun and Mainichi Shimbun's survey data conducted against Japanese Dietmen candidates have been utilized. And their responses to political ideology and 14 policies expressing well their liberal and conservative stances were used. Results of the analysis proved that their levels of hard line conservatism are much higher than the general public in Japan. Especially,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LDP) occupying more than 60% of the seats, are almost hard line conservatives. LDP members of the House of Councilors are, but not as much as the Representatives, not much different.

The direct impact to the hard line conservatism of LDP members by Prime Minister Abe, who has served as the LDP president from September 2012, is relatively low.

However, Prime Minister Abe's continuous claims of 'Regain of a strong Japan' and 'Pride in Japan history' has been an evident guide of the hard-line conservatism of them.

### Key words

Japanese Politics, Prime minister Abe, Japan Conservatism, Liberal Democratic Party